

1990년대생을 위해 연금 개혁은 필수

노현지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

□ 국민연금 2055년으로 고갈될 것으로 추정, 연금 개혁을 통한 해결방안 필요

- 2022년 국민연금 재정을 다시 계산한 결과,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될 것으로 나타남. 현재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1990년대생이 정작 연금 수급 나이가 되면 연금 고갈로 연금을 받지 못함.
-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34년 만에 수급자가 600만 명을 돌파함과 동시에 저출산·고령화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수급자만 증가하고 있음.
-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%로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임.

□ 점점 당겨지는 적립금 고갈 연도와 줄어드는 재정수지

<표 1> 연도별 기금 적립금 예상 고갈 연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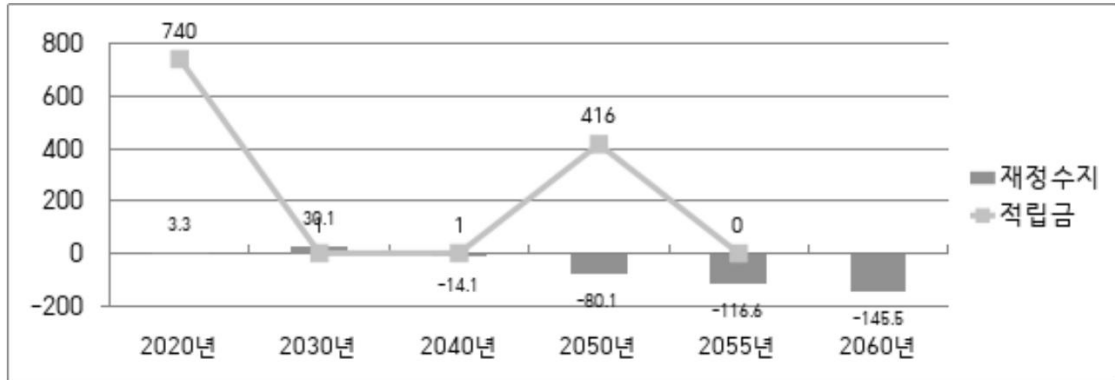
개정안	년도	예상 고갈 연도	변동 연도
1차	2003년	2047년	-
2차	2008년	2060년	+13년
3차	2013년	2060년	+0년
4차	2018년	2057년	-3년
-	2020년	2055년	-2년

자료: 보건복지부, 한국경제연구원

- 장기적인 국민 재정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재정안을 발표함.
-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적립금 고갈 예상 연도가 계속 앞당겨지고 있음.
- 보건복지부 개정안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(수입-수출)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.

<그림 1> 국민연금 재정수지, 적립금 전망

(단위: 조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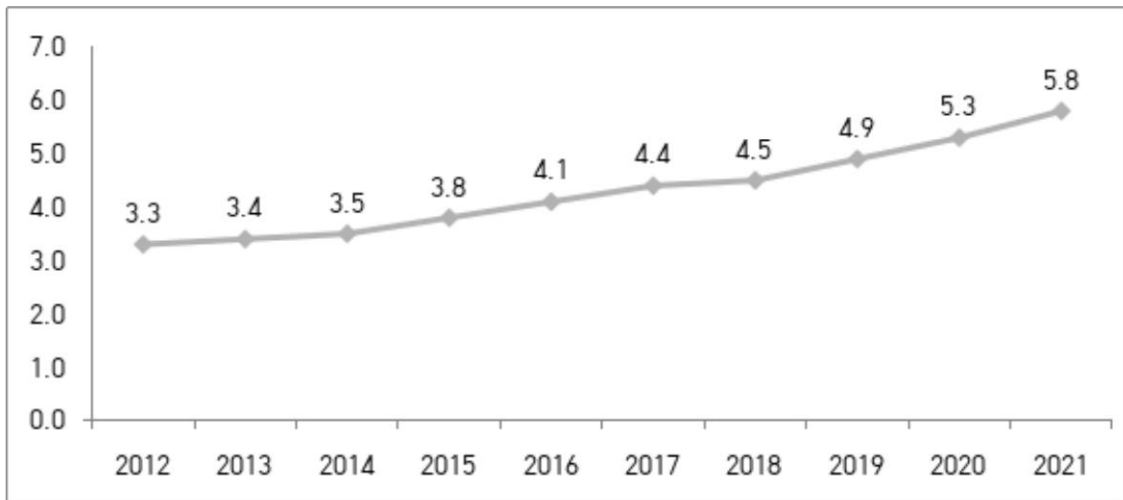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「4대 공적연금 장기재정 전망(‘2020.7월)」

□ 점점 늘어나는 국민연금 수급자 수

<그림 2> 국민연금 수급자 추이

(단위: 백만명)



자료: 통계청

- 본 수치는 노령연금, 장애연금, 유족연금을 합한 수치임.
- 1988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5,864,373명을 기록함.
- 2022년 3월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600만 명을 돌파했음. 수급자 수가 30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늘어나는 기간은 약 4년, 이후 500만 명 돌파까지는 약 3년, 600만 명을 돌파하기까지는 약 2년이 걸렸음. 100만 명 단위로 수급자

[팩트&파일]

수가 늘어나는 주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음.

-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.4명에서 2050년 93.1명으로 약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.

□ G5 국가보다 보험료는 덜 내고 연금은 더 빨리 받는 한국

<표 2> G5 국가와 한국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및 보험료율

		한국	미국	일본	독일	영국	프랑스
연금 수급 개시 연령	현행	62세	66세	65세	65세	66세	67세
	상향예정	65세	67세	75세	67세	68세	-
보험료율		9.0%	10.6%	18.3%	18.6%	25.8%	27.8%

자료: 한국경제연구원, 국회예산정책처(2019년)

- 한국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임. 하지만 G5 국가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.
- 한국의 보험료율은 9.0%로 G5 국가 평균(20.2%)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임.

□ 위태로운 국민연금 바로 잡기 위해서는 연금 개혁 시급

-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부담·고급여의 체계임. 늘어가는 노령층 인구와 저출산의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연금 개혁이 시급함.
- 국민연금이 고갈되더라도 적립식 연금이 아닌 부과식 연금으로 변경할 경우 90년대 생도 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됨.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을 피할 수 없음.
- 국민연금 구조가 현행 수준의 소득대체율(40%)을 맞추려면 9.0%로 정해져 있는 보험료율을 24.6%까지 상향하여 조정해야 함. 따라서 연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OECD 평균치인 22.9%까지라도 보험료율을 점차 올려나아가야 함. 보험료 인상이 어렵다면, 현재 62세인 수급 개시 연령을 뒤로 늦추는 방안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.
- G5 국가들이 지속적인 연금 개혁을 통해 노후 소득 기반 확충을 도모했듯,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조금 또는 세액 공제를 지원하는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.